

광주·전남 주요사건, 해 넘겨도 계속 된다

브로커 둘러싼 검찰 보강수사 과정서 기소 대상 확대 전망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들·사기 분양 등 주요 공판 속행 보조금·사무관리비 횡령, 공공택지 불법 공급 등 수사 한창

올 한해 광주·전남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주요 사건 재판과 수사가 해를 넘겨 계속된다.

25일 법조계와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사사건(김경) 브로커 성모(61)씨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수감 중)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20년가량 검경·정관계 고위직에게 접대하며 수사·인사 분야에서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 실제 성씨의 로비로 사기 범죄 전력이 10건이 넘는 택시가 구속되지 않고 편의를 누렸다.

성씨의 수사·인사 청탁 비위 연루자들도 재판받고 있거나 수사방에 올랐다.

현재까지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모씨(수사 기밀 유출·편의 제공), 서울청 전 경무관 장모씨(수사 무마), 광주청 전 경정 김모씨(인사 청탁), 전남청 전 경감 이모·정모씨(인사 청탁)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의 관공사 수수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늘 것으로 관측되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 청탁 비위를 저지르고 몰래 변론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21년 12월 9일 기소된 판사(전관·前官) 출신 변호사 2명의 재판은 공전을 거듭하

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2명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구속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석 석방해 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 2억 2000만 원을 받고,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제출하게 해 몰래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첫 재판(2021년 12월 23일) 이후 법관 인사, 증인 불출석 등으로 재판장이 4번이나 바뀌며 공전을 거듭하면서 '전관 특혜 논란'이 일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의 재판 역시 새해에도 이어진다. 이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 또는 경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하거나 검사 출신 변호사 알선에 개입하는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상자를 낸 책임이 있는 20명에 대한 공판은 내년 2월 19일 속행된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사기 분양한 건설사·분양대행사 대표를 둘러싼 민형사 재판도 증거 조사를 중심으로 이어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담양·영암군수와 목포시장 등 전남 지자체장들의 항소심도 속행된다.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는 삼자 변제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불거진 정당성·적법성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를 넘겨 진행되는 경찰 수사도 수두룩하다. 광주경찰청은 자치단체·대학·기업 간 협업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취지로 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의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교육부 주관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연구과제를 맡아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 36억 원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남대학교 A교수와 연구 참여업체 임직원 등 9명을 입건했고, 전남대 내 사업단이 수행했던 사업 전반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의료기업 한국지부 대표 행세로 '투자 이민 영주권 획득' 등을 빌미로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교포와 그 가족을 둘러싼 후속 수사도 한창이다.

광주경찰청은 또 지역단위 농협 조합장의 채용 명목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입건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유령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불법 공급받은 정황과 광주 모 서구원의 둘러싼 금품·향응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막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선대 무용과 전임 교원 임용 부정 의혹도 재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세금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를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산 전남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거나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 보성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직무와 관련해 사업가로부터 갈포 접대를 받고 수사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직권남용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발송했던 장흥군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요청으로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슬비기자



고흥 도하파출소, 소외계층 대상 사랑나눔 활동

고흥경찰서 도하파출소에서는 지난 20일 오전 연말 연시를 맞아 불우이웃 가정을 방문해 위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장흥경찰, 유관기관·협력단체와 합동점검 실시

장흥경찰은 최근 최근 국도2호선(향양교차로-순지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유관기관·협력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경찰, 군민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정성치안 활동 전개

진도경찰서는 믿음직한 경찰 이미지 제고 및 정성치안 활동 전개를 위해 「마을 당 경찰관」을 지난 28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담양소방, 담양교육지원청과 안전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담양소방서는 지난 22일 전라남도 담양교육지원청과 재난으로부터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강진소방, 2023년 전라남도 긴급구조훈련 평가 1위 수상

강진소방서는 도내 22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전남소방본부가 주관한 2023년 긴급구조훈련 평가에서 도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양소방, 겨울철 대형화재 위험대상 현장밀착 점검

광양소방서는 지난 20일 겨울철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대상에 대한 현장 밀착 점검을 통해 화재안전 환경 조성을 하고자 광양시에 위치한 세운철강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아빠와 눈싸움 하는 아이

크리스마스인 2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눈싸움을 하고 있다.

‘아이폰 덕에’...제주서 음주운전 차량 전복 사고 20대들 구사일생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 위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운전자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25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8시44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A(2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충격을 감지한 A씨의 아이폰이 119에 자동 구조 요청 신고를 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2명 등 총 3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오늘부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

‘이미지’ 몰래 쓰면...3년 이하 징역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국무회의 의결 후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부정한 사용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인정보 무단 도용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월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돌출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물도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속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서선옥기자